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전재호 | 서강대학교

| 논문요약 |

이 글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를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새터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민주화와 탈냉전을 포함한 대내외적 정세는 한국 민족주의의 핵심 담론이던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변화시켰다. 정서적이고 당위적인 통일인식은 현실적이고 소극적인 인식으로, 맹목적인 대북 적대의식은 '우월적인 반공의식으로, 그리고 맹목적인 친미의식은 현실주의적인 대미의식으로 전환되었다.

다음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주요한 특징인 순혈주의적 단일민족관념도 199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자, 조선족, 새터민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은 같은 외국인일지라도 노동 이주자는 배제하는 데 비해 결혼 이주자는 수용하는 상이한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족 대거 유입 이후 재외동포에 대해 출신국에 따라 차별하는 위계적 인식을 보이며, 새터민에 대해서도 상당한 거리감을 느낀다. 같은 민족인 조선족과 새터민에 대한 인식은 단일민족관념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에서 일어난 변화, 곧 현실주의적 인식의 확산과 단일민족관념의 균열은 민족적 자긍심과 민주적 의식을 지닌 세대의 증가와 노동 및 결혼 이주자의 유입을 필요로 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로 인해 지속될 것이다.

주제어 | 민족주의,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I. 들어가는 말: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는 어떻게 변했는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정치적으로 군부 권위주의 세력이 퇴진했고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었으며 선거 제도를 포함해 많은 반(反)민주적 법률과 제도가 개폐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정치적 공간'이 확장됨으로써 노동운동과 함께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발전국가'가 퇴진하고 친(親)자본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시되었다.[1]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한국인의 사고를 지배했던 민족주의 담론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권위주의 시기 한국의 민족주의 담론은 '우리의 살 길'은 반공(反共)과 친미(親美)라는 내용과 한국인은 동일한 조상에서 출현한 단일민족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전개된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은 한국 민족주의의 지배담론인 반공(反共)과 친미(親美) 담론 및 '순혈주의적' 단일민족 담론에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민주화 이후 전개된 국내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핵심 요소였던 반공주의와 친미주의에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 말 시민사회의 통일운동과 북한바로알기운동,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1990년대 북한의 고립과 핵·미사일 개발 및 경제난,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남북교류, 2000년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000년대 미국과 북한의 대치 및 북한의 핵실험과 6자회담,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의 악화 등 한반도의 정세 변화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탈냉전 이후 미국의 '노골적인' 시장 개방 압력,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부시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파병 요구, 미국발 경제위기와 중국의 부상 등은 한국 민족

1) 민주화 이후 한국인은 정부의 경제 개입을 독재의 유산으로 인식하여 국가의 퇴진과 시장의 회복을 요구했다. 이후 한국에서는 민주화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게 되었다(이강국 2005, 328).

주의 담론의 중요한 요소인 친미주의, 곧 한국인의 대미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한민족은 동일한 조상에서 유래했다는 단일민족관념도 199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인 및 '이질적인' 한민족의 유입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2] 1990년대부터는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가,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와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후반에 외국인 '100만 시대'가 열렸다. 이는 극소수의 화교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같이 살았던 경험이 없었던 한국인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또한 외국인 결혼 이주자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 및 같은 한민족이지만 장기간의 역사적 단절로 인해 이질성이 상당히 큰 조선족과 새터민의 유입은 단일민족관념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가 가져온 효과 역시 한국 민족주의에 변화를 가져왔다. 민주화는 '정치 공간'의 확장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시민운동과 노동운동뿐 아니라 통일운동의 발전이 가능했다. 또한 민주화가 가져온 '민주적 시민의식'의 성장이 단일민족관념이 지닌 폐쇄성과 배타성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민주화의 성공은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인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시켰고, 이는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강대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는 국내외의 여러 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변화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민주화에 '기인한'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전개된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및 그것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을 고찰한다.[3] 그리고 이 글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그리고 새터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민족주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가시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2)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성공 결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변화된 한국의 경제 환경, 곧 3D 업종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3) 이 글은 종속변수로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족주의를, 그리고 독립변수로 민주화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을 설정한다.

이 주제들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가진다는 정치적 원칙을 의미하는데, 이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그것은 통일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를 살펴보는 적절한 지표로 통일과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민족주의는 국가 간의 평등, 곧 주권을 가정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평등은 이상(理想)이지만 민족 구성원들은 이를 타민족에게 요구하고 자민족에 대한 주권침해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반응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발견되는데, 일본과의 관계는 주로 과거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은 현재 진행형인 미국에 대한 인식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순혈주의적' 단일민족관념을 큰 특징으로 갖고 있다. 이는 '인위적' 인식이지만 소수 화교를 제외하고 이민족과 같이 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 및 동족인 조선족과 새터민의 이주가 급증하면서부터 이런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인 단일민족관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외국인, 재외동포, 그리고 새터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선택했다.

사실 민족주의나 이 글이 다루는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새터민과 같은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한국 민족주의와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은 이 주제들을 모두 한국 민족주의라는 주제로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를 고찰한다. 그러면 다음 절부터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를 대외적으로 통일, 북한, 미국, 그리고 대내적으로 외국인, 재외동포, 새터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II.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대외적 측면

민족주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를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절은 민족주의의 외적 측면을 통일, 북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 통일에 대한 인식: '정서적'이고 '당위적'인 인식에서 '현실적'이고 '소극적인' 인식으로

통일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 이론적으로 통일은 민족주의의 근본적인 정치 교리인 1민족 1국가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한국인은 남북을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로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단 정부 수립 이후 진행된 개별적인 국가건설은 남북을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로 만들었고, 게다가 분단을 보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분단 이후 출생 세대의 증가는 어떠한 방식으로건 한국인의 통일인식을 변화시켰다.[4] 분단 초기에 한국인에게 통일은 논리나 설명이 필요 없는 자연스럽고 즉자적인 명령이었다. 하나의 민족, 곧 민족동질성에 기초한 '당위적 인식' 이었다면, 언제부터인가 통일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초래하는 불안정을 해소하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인식으로 전환되었다.[5] 게다가 상당수의 한국인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통일보다 현 분단 상황이 낫다는 '소극적' 인식을 갖게 되었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65년이 지난 2010년 과반수 이상(59%)의 한국인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21).

5)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 이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자 안보 불안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22).

다. 곧 민족동질성에 기초한 당위적 통일 인식이 점차 이해관계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소극적인 통일 인식으로 변했다.

이러한 한국인의 통일 인식 변화는 냉전체제에 균열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민주화 이후 '개방된' 공간에서 민주화운동 세력은 1988년 봄부터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북한바로알기운동'과 '올림픽공동개최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1989년 3월에는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방문했고 6월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임수경이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도 소련, 동구권의 개혁·개방을 계기로 북방정책을 실시하여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동시에 북한과의 접촉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91년 북한과 UN에 동시 가입했고 1992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활동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제고시켰을 뿐 아니라 그동안 잊었던 '동족(同族)' 북한을 '재발견'하게 만들었다. 곧 한국인은 북한이 '동족'이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도 한국인의 통일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족을 강조했고 '진보인사'로 알려진 한완상을 통일부장관에 임명했으며, 장기수 이인모를 북송했고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그러나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와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였고 1994년 6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일어난 남한 내 '조문파동'은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연이은 자연재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조기붕괴론'이 등장하여 북한이 곧 남한으로 흡수 통일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표 1〉은 이를 잘 보여주는데, 표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비율이 1990년대 중반 가장 높았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이내 통일 가능성' 응답률을 보면, 1993년 45.1%, 1994년 73.8%, 1995년 51.4%, 1998년 33%, 1999년 30%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통일예상시기를 '30년 이상' 및 '잘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은 1998년과 1999년 32.7%와 34.2%로 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이는 한국인이 1990년대 중

〈표 1〉 통일예상시기

	2,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절대불가능/잘모름
1993	1.3	6.5	37.3	23.6	7.2	9.2	13.3
1994		17.5	56.3		18.7	7.1	0.4
1995		9.5	40.9	26.9	7.1	15.5	
1998		4.7	28.3	27.1	7.2	10.6	22.1
1999		3.0	27.0	28.3	7.4	11.3	22.9

민족통일연구원 1993, 75; 1994, 92; 1995, 75; 1998, 55; 통일연구원 1999, 47

반 '조기' 통일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곧 북한이 최악의 상태였던 1990년대 중반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데 비해, 김정일 체제가 안정되었던 1990년대 말에는 통일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다. 1990년대의 이러한 인식 변화는 한국인이 이제 통일을 무조건적 당위가 아니라 현실에 기초하여 전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곧 1990년대부터 한국인은 '현실적인' 통일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통일 의식은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진행한 이후 더욱 확고해졌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경제협력도 확대되었으며, 2000년 6월에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시기는 연평도 사건 및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분단 이후 가장 진전되던 시기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통일정책 대신 대북정책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통일을 서두르지 않았고, '2국가 2체제'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추구했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통일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남북정상회담 2년 뒤인 2002년 9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1.6%가 '점진적인 통일'을 원했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다. 또한 '통일보다 남북한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도 24.8%에 달했다. 이는 한국인이 통일

에 대해 점진적인 동시에 소극적 인식을 지녔다는 점을 보여준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2, 6). 이런 경향은 2005년 EAI중앙일보의 '국민정체성'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유보적' 또는 '소극적' 의견('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 54.6%,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19.6%,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7.9%)이 82.1%로, '적극적' 의견('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17.4%을 압도했다(이내영 2007, 206). 그리고 절대다수(88.2%)가 '최소한' 남한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통일을 요구했다.[6] 이는 사실상 남한체제가 아니라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 한국인이 대다수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에 대한 소극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

당시 한국인의 통일 인식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요인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상이한 사고와 행동양식이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 사정 악화와 주민들의 생활고는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그리고 지속적인 남북 교류는 상호 이질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남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대다수 한국인이 여전히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는 당위적 인식일 뿐 실제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통일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한다.[7]

이렇게 변화된 통일 인식은 2000년대 후반에도 확인된다. 2000년대 후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008년을 기점으로 민족동질성 차원의 비중이 축소되고 현실적 차원의 비중이 증가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민족동질성 차원의 응답('같은 민족이니까')은 지속적으로 현실적 차원의 응답('남북한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을 압도했지만 2008년 이후 전자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후자에 의해 역전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대북강경정

---

6) 조사 결과는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의 통일' 52.9%, '남한식 체제로의 통일' 35.3%, '남한식도 북한식도 아닌 제3의 체제로 통일' 8.3%였다(이내영 2007, 206).

7) 2005년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 당위성'에 대해 '매우 찬성' 49.2%, '대체로 찬성' 34.7%, '대체로 반대' 12.8%, '매우 반대' 3.3%였다(통일연구원 2005, 96).

〈표 2〉 통일의 필요성

	같은 민족이니까	남북 간에 전쟁을 없애기 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2007	50.6	19.2	18.7	8.9	1.8
2008	57.3	14.5	17.1	6.8	4.3
2009	44.0	23.4	18.6	8.5	5.5
2010	43	24.1	20.7	7.0	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7, 13; 2010, 23-24

책이 실시되면서 천안함 사건과 같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경험한 한국인이 좀 더 현실적으로 통일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압박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특히 2010년의 천안함 사건과 2011년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북관계를 최고로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은 한국인이 통일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2010년의 조사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인식('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23.5%,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19.6%)이 2005년(19.3%, 7.9%)에 비해 급증한 데 비해 긍정적, 적극적 인식('빨리 통일해야 한다')은 17.4%에서 10.4%로 감소했다(중앙일보, 2010년 12월 4일).

결국 남북교류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변화했다. 한국인은 이제 민족동질성에 기초한 당위적 명령에 기초한 즉각적 통일이 아닌 현실적 계산에 기초한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한다. 이러한 변화는 분단을 가져온 냉전체제의 붕괴, 2국가 체제가 낳은 남북한의 이질화, 그리고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의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활발히 진행된 남북교류는 역설적으로 한국인이 통일을 현실적이고 소극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한국인은 당위보다 이해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이고, 즉

각적인 통일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에 기초한 점진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통일 인식을 지녔다.

2. 북한에 대한 인식: '맹목적인' 적대의식에서 '우월적인' 반공의식으로

남북의 한민족은 분단 직후에는 서로를 구별하지 않았지만 분단 정부 수립 이후 생사(生死)를 건 전쟁을 거치면서 서서히 한민족 정체성과 구별되는 대한민국 '국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게다가 냉전체제 아래서 남과 북은 주민들에게 한민족 정체성과 구별되는 자국가의 '정치적'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상대방을 '적(敵)'으로 간주했다. '무찌르자 공산당'이라는 구호가 잘 보여주듯이 한국인에게 북한(정부 또는 주민)은 동족이 아닌 '제거해야 할 적'이었다. 특히 냉전 시기 권위주의 정권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대북 적대의식을 고취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한국인은 대북 적대의식을 내면화했다.

그러나 한국인의 대북 적대의식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대북인식을 유추할 수 있는 조사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의 축구경기에서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1980년대 후반 계속 증가했다(〈표 3〉). 물론 이 사례가 한국인의 대북 적대의식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표 3〉 국제축구경기에서 북한 응원자의 비율

	북한 대 미국	북한 대 일본
1986년	21.8	45.9
1987년	56.0	74.6
1988년	60.0	76.3
1989년	71.9	82.6
1990년	85.4	93.9

설동훈 외 2002, 36: 재구성

〈표 4〉 북한에 대한 인식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중립적 인식	기타
	협력대상	지원대상	계	적대대상	경계대상	계	경쟁대상	잘 모름
1993	28.7	50.8	**79.5**	14.3		14.3	5.7	0.4
1994	20.4	39.2	**59.6**	7.1	30.7	37.8	2.5	×
1995	25.2	11.7	39.9	15.9	43.7	**59.6**	3.5	×
1998	24.8	12.4	37.2	13.8	40.6	**54.4**	3.3	5.1
1999	32.6	19.3	**51.9**	8.2	28.7	36.9	3.1	8.2

민족통일연구원 1993; 1994; 1995, 통일연구원 1998, 1999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민족동질성은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그동안 억눌린 북한에 대한 관심의 표출로 볼 수 있다.

1990년대의 조사는 한국인의 대북 적대의식의 변화를 더 잘 보여준다. 1990년대 대북인식 조사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초기(1993, 1994)와 김대중 정부 출범 2년차(1999)에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반면, 1995년과 1998년에는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았다(〈표 4〉).

이는 조사 당시의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93년과 1994년에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고 남북관계도 개선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한국인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았을 뿐 아니라 북한을 협력 또는 지원 대상으로 인식했다. 또한 1999년 대북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1998년부터 시작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효과로 보인다. 반면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인한 '조문파동'과 1995년 대북 쌀 지원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비상식적' 돌출행동은 1995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민족통일연구원 1995, 11-17).

결국 1990년대의 조사는 1990년대 한국인의 대북인식이 북한의 상황,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정세에 따라 변했고, 이는 한국인이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북한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곧 1990년대의 대북인식은 권위주의 시기의 감정적이고 맹목적이던 대북 적대의식과 달리 경제적 우위에 기초한 '우

〈표 5〉 북한에 대한 인식/태도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무관심
	협력대상	지원대상	계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경쟁대상
2003	38.2	16.2	55.4	28.6	12.5	41.1	
2005	41.8	23.1	64.9	20.9	10.2	31.1	4.0
2007	56.6	21.8	78.4	11.8	6.6	18.4	3.3
2008	57.6	21.9	79.5	11.3	5.3	16.6	3.8
2009	50.7	20.6	71.3	17.4	9.0	26.4	2.3
2010	44.7	19.3	64.0	20.7	12.0	32.7	3.3

통일연구원 2005, 1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7, 24; 2010, 23-24

월적' 반공의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대북인식의 변화는 북한이 핵 개발을 선언하고 북미관계가 대결을 지속하며 남북관계 역시 정상회담에서 무력충돌로 격랑을 겪었던 200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표 5〉에 따르면 2000년대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2008년을 기점으로 전환되었지만 긍정적 인식이 다수이다. 1999년 51.9%였던 긍정적 인식은 2003년 55.4%로 증가했고,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긍정적 인식은 통일의식과 마찬가지로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대신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 악화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던 2010년에도 여전히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을 압도한 점을 볼 때,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더 이상 과거의 맹목적인 적대의식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냉전시기 한국인의 대북 적대의식은 한국전쟁의 경험, 북한의 호전성, 군사력의 열세,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적대의식은 1980년대 후반 남한의 민주화에 기인한 통일운동과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을 계기로 변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냉전 붕괴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된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약화, 강화를 반복했지만 점차 약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곤경,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한국의 국제

적 위상 상승과 경제적 성공은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두려움과 적대의식을 변화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인은 맹목적인 적대의식 대신 경제적 우위에 기초한 반공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 진행된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교류를 통해 더욱 확고해졌다. 그러나 앞 절에서 보았듯이 대북 적대의식의 약화가 곧바로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확산된 이후 한국인이 현실적이고 소극적인 통일인식을 보인 점은 동질성 대신 '이질성'을 더 분명히 인지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3. 미국에 대한 인식: '맹목적인' 친미에서 '현실주의적인' 대미인식으로

민족주의는 민족국가 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민족국가는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주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주의는 자연스럽게 반(反)제국주의적, 곧 '저항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독립 이후 강대국에 대한 '배타적' 성격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냉전 시기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비동맹과 같이 미소라는 두 강대국과 거리를 두는 독자적 노선을 지향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서 출발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이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해방을 가져왔고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았으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인에게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자,' 북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의 '구원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한국인은 상당 기간 '숭미(崇美)의식'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맹목적인 친미의식을 가졌다. 1965년 주한 미국공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68%의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로 미국을 선택했고, 1981년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60.6%에 달했다(이강로 2004, 250). 이는 최소한 1980년대 초까지 한국인이 대다수가 미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 곧 친미의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국인의 친미의식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2년 부산과 1985년 서울·광주의 미국 문화원 방화 또는 점거 사건은 제한적이지만 '반미(反美)의식'의 표출이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세력들은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과 관련하여 미국이 신군부를 지원했다고 비판하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신화'에 도전했다. 또한 민주화세력은 1980년대부터 권위주의 정부가 시장개방이라는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비판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PDR)' 세력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면서 반미(反美)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한국인의 대미인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치 않다. 대신 한국인의 대미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준 사건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보여준 미국 NBC의 편파보도와 유명 선수들의 오만함이었다. 그래서 한국인은 미국 선수보다 소련 및 동구권 선수를 더 응원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1980년대 한국인의 대미의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선택한 한국인이 1981년 60.6%였는데, 유사한 질문('미국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이다')에 대한 응답이 1984년 37.3%, 1987년 36.3%, 1990년 19.5%, 1991년 19.7%였다(이강로 2004, 253). 그러나 이 결과를 한국인의 친미의식 약화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좋아하지 않고 '그냥'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1995년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한국인(70.1%)이 미국을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선택했다.[8] 다만 이 조사는 '숭미' 의식이라고 지칭될 정도였던 미국에 대한 절대적 호감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2000년대의 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대미의식 변화가 분명히 보인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2003년 3월 조사를 제외하고) 2001~2004년까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고, (2002년 2월을 제외하고는) 중립적인 인식이 과반수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00년대 전반 한국인

8) '한국이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미국 70.1%, 북한 16.4%, 중국 6.7%, 일본 6.1%, 러시아 0.7% 순으로 선택되었다(민족통일연구원 1995, 58).

〈표 6〉 미국에 대한 인식

	(아주, 약간) 좋다	(약간, 매우) 싫다	중립	모름/무응답
2001 (서울대 사회발전연)	30.5	39.9	42.3	
2002.2 (한국 갤럽)	33.7	59.6	6.7	
2002.12 (한국 갤럽)	37	54		
2003.3 (코리아리서치)	23.0	29.5	46.0	1.4
2003.5 (코리아리서치)	26.3	19.9	52.5	1.2
2004.9 (코리아리서치)	20.0	24.4	53.9	1.6

의 친미의식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항의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었다. 게다가 2003년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요청하자 많은 한국인은 파병반대와 함께 반전(反戰), 반미를 구호로 시위를 조직했다. 그 결과 2005년의 조사가 보여주듯이 한국인 사이에서 반미의식이 친미의식에 버금갈 정도로 확산되었다. 이 조사는 중립적 견해를 제외한 채 오직 찬반만을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절반 정도의 한국인이 반미정서를 지지했다.[9] 그러나 2005년의 또 다른 조사는 여전히 한국인이 주변국가들 중에서 미국을 가장 신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10] 이는 반미의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을 가장 신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9) '귀하는 한국의 반미정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지지한다' 50.3%(매우 지지 12.3%, 대체로 지지 37%)와 '반대한다' 49.7%로(대체로 반대 20.3%, 매우 반대 19.5%) 나타났다(통일연구원 2005, 121).

10) 2005년 조사에서 한국인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 19.8%, 일본 6.4%, 북한 6.1%, 중국 6.1%, 러시아 3.7%였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미국 44.4%, 러시아 57.4%, 북한 61.6%, 중국 63.6%, 일본 72.3%로 미국이 가장 낮았다(이내영 2007, 199).

〈표 7〉 한국인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1995	70.1	6.1	16.4	6.7	0.7
2007	53.4	11.6	24.0	10.2	0.9
2008	59.9	9.6	21.8	7.7	1.6
2009	68.2	8.7	15.9	6.1	1.0
2010	70.6	9.6	14.8	4.2	0.7

민족통일연구원 1995, 5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122-124

그런데 2000년대 후반의 조사는 친미의식이 약화되던 이전의 경향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2000년대 후반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한국인의 비율은 점점 증가했다(〈표 7〉).

1995년 70.1%였던 비율은 2007년에는 53.4%로 하락했지만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10년에는 다시 1995년의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의 악화,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건 등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곧 북한이 2차 핵 실험 직후인 2009년 6월의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주외교보다 우세했고(매일경제, 2009년 6월 17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일어난 직후인 2010년 12월의 여론조사에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7.9%인 반면, '독자외교'에 대한 지지는 26.5%였던 결과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11] 그러나 이것이 과거의 친미의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일본에 대해 반감을 가진데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을 우려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동북공정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적 지위의 급상승에 따른 '패권주의'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리적 거리감만큼 심리적 거리감도 크다. 그렇

11) 2010년 조사는 2005년에 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0.3%에 비해 증가한 반면, '독자외교'에 대한 지지는 축소되었다(중앙일보, 2010년 12월 4일).

기 때문에 한국인이 안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주변국은 미국 외에는 없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는 한국의 안보를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친미의식은 미국을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보은의식을 지녔던 냉전 시기의 맹목적인 친미의식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띤 것이다.

결국 냉전 시기를 지배했던 맹목적인 친미의식은 냉전의 붕괴 및 경제성장과 민주화 성공 이후 등장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냉전 붕괴는 미국이 더 이상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국가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보통 국가' 임을 드러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새로운 세대는 구세대와 달리 미국에 대해 보은의식과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지녔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은 미국을 무조건 숭배 또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에 기초하여 미국을 평가한다. 곧 21세기 한국인은 현실주의적 대미의식을 갖고 있다.

III.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대내적 측면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혈통, 언어, 피부색 등이 완전히 다른 외국인이 대거 이주하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12] 1990년대 이후 중국과 동남, 남아시아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결혼이주자가 유입되면서, 1990년대 초만 해도 몇만에 불과하던 외국인 수가 2010년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2.5%인 126만 명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자녀가 증가했다.[13]

---

12) 민족주의의 대외적 측면이 주로 정치적 교의와 연관되었다면 대내적 측면은 정체성 및 담론과 연관되어 있다.

13)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4,235건으로 2009년보다 9백 건 증가했고, 외국인과 혼인은 총 혼인(326,104건) 중 10.5% 수준이다(통계청 2012).

〈표 8〉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 1999~201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체류 외국인	381,116	491,324	566,835	629,006	678,687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총인구 대비 비율	0.8	1.0	1.2	1.3	1.4	1.5	1.5	1.86	2.16	2.34	2.35	2.50

이삼석 외 2011, 64

이는 그동안 한국 민족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순혈주의적' 단일민족 관념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관념은 한민족이 한 명의 조상에서 유래한 '순수' 혈통을 보유했다는 인식과 한민족은 하나의 언어, 문화, 영토,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동질적 집단이라는 인식이 결합된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 소수의 화교를 제외하고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주민의 대량 이주 및 2007년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의 '단일민족국가' 이미지 극복 권고 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행정기관과 학교에서 '다문화' 정책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국이 장래에 다문화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 한국인의 순혈주의적 단일민족관념을 변화시켰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에서는 1절에서 1990년대 이후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2절과 3절에서는 1990년대부터 등장한 중국동포로 인해 부쩍 쟁점이 되었던 재외동포와 200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새터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본다. 새터민은 '같은 민족' 이지만 사고방식부터 생활방식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인과 매우 다르다. 한국인이 그들과 접촉하기 전까지는 그들에 대해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직접 접촉하게 되면서부터 그들과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새터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 절에서 다룬다. 이를 통해 한국 민족주의의 핵심인 순혈주의적 단일

민족관념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외국인에 대한 인식: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상이한 인식

1990년대 이전까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손님' 이었다. 해방 이후 화교를 제외하고 한국에 오래 거주하는 외국인은 극소수였기 때문에 한국인은 외국인은 잠시 한국에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노동이주와 그들의 장기 체류 및 2000년대 영구 거주를 전제로 한 결혼이주 여성의 지속적 유입으로 바뀌게 되었다.

1990년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인에게 그들은 잠시 머물렀다 떠날 손님이었고 정부의 정책 역시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 서있었다. 정부는 1991년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 의 시행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체류기간 역시 연장되었지만 귀화조건이 몹시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자국민으로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한편 2000년대부터 한국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이주가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한국 여성의 만혼과 독신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과 도시의 저소득 남성들이 국내에서 결혼배우자를 찾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 현상 극복, 지역 인구 증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국제결혼 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중앙 정부 역시 국제결혼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한국 사회 부적응, 빈곤화, 자녀 양육 곤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했다.[14]

---

14) 정부는 2005년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의 인권실태 및 차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결국 199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 정책을 전개한 데 비해, 결혼이주자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로의 성공적 적응을 지원하는 상대적으로 '수용적' 인 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입국 목적을 기준으로 외국인에 대해 상이한 대응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면 외국인의 대량 이주라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 한국인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2007년 이주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78%)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적 권리' 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보다 낮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 이주자 정책 마련 과정에서 그들의 의견 수렴, 이주자 인권보호 등에 대해 찬성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국민 또는 민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의 조사에 따르면 '계약 종료 외국인 노동자들 귀국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 본국 송환에 찬성하는 비율' 은 모두 50%가 넘었다. 곧 과반수가 외국인 노동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하고, 불법 체류자는 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황정미 외 2007, 108). 결국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복합적이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는 인정하고 배려하지만 법적 체류 기간을 넘긴 장기 거주는 반대한다. 이는 한국인이 여전히 '다른 민족' 인 외국인을 한민족 또는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6년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에 대한 분석 역시 이런 경향을 보여준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에 대해 한국인의 69%가 '한국인' 으로, 그리고 54.4%가 '한민족' 으로 보았다(설동훈 2006, 88).[15] 절반의 한민족의 피가 섞인 자녀에 대해 한민족이라는 응답이 절반 정도라는 점, 그리고 한국인보다 한민족이라는 응답

2006년에는 결혼이민자 및 혼혈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8년 12월 확정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이삼식 외 2011, 57-58).

15) 결혼이민자 가족의 부모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자녀를 한국인(97.3%)인 동시에 한민족(97%)으로 보았다(설동훈 2006, 84).

이 낮은 것을 볼 때, 한국인이 여전히 혈통에 근거한 단일민족관념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절반 이상의 한국인이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이주자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위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54.9%의 한국인이 부모의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고, 반대는 15.7%에 불과했다(황정미 외 2007, 104-108). 이는 한국인이 민족 개념은 혈통적으로 그리고 국민은 시민권적으로 구별하여 인식한다는 사실과, 단일민족관념이 지속되지만 한국인이라는 국민 개념의 범주는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후자의 경향은 외국인 귀화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인은 같은 민족인 조선족이나 인종적으로 비슷한 중국인이나 몽골인, 일본인보다 인종, 언어, 문화가 아주 다른 미국인의 귀화를 인정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는 한국인이 국민의 자격에 대해서는 혈통적 특징을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황정미 외 2007, 99).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주자와 그 자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단일민족개념이 지속되는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곧 외국인의 대량 이주로 이제 한국인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경향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모순적 인식은 2011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인의 66.9%는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친밀감' 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59.3%가 '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사람들이 느끼는 위협감이 커질 것' 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인의 절반 정도(57.8%, 50.8%, 47.5%)가 언어, 종교, 피부색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이주자와 갈등이 존재할 것이며, 64%가 외국인 이민자가 증가하면 외국과 같이 그들의 소요사태나 데모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삼식 외 2011, 216-228).

결국 민주화 이후 민주적 의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법적 처우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한국인은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이주를 원하지는 않는다. 반면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한국 국적 취득은 옹호한다. 이는 한국인이 같은 외국인일지라도 노동 이주자와 결혼 이주자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혼 이주자가 한민족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혈통 중심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과의 공존을 의미하는 다민족, 다문화 담론이 확산되었지만 다수의 한국인은 여전히 순혈주의적 단일민족관념을 유지하고 있다.

2.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경제적 위상에 따른 위계적 인식

한국의 민족구성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그동안 잊혔던 조선족과 새터민의 유입이었다. 양자는 모두 '같은 민족' 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닌 '동포' 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인에게 재외동포는 주로 교포로 불렸고, 재일교포와 재미교포를 의미했다. 재일교포는 식민지 시기 반강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로서 일본에서 차별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안타까움과 함께 반일(反日) 감정을 일으키는 존재였다. 또한 친(親)북한의 조총련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다. 반면 재미교포의 경우에는 주로 해방 이후 이주한 사람이 다수였고, 그래서 한국과 지속적으로 활발히 교류했다. 특히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는 한국인은 제한되었고 상당수가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인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국인은 재일교포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한 데 비해, 재미교포의 경우 미국 국적을 취득해도 계속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이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미국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록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차별당하는 존재였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 재외동포는 주로 한국보다 선진국에 사는 동포였기에 대체로 한국인은 그들을 동경했다.

그런데 재외동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1990년대 초 조선족과 고려인이 유입되면서 변화했다. 특히 한국이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하고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후진적인 지역으로부터 많은 동포가 유입되자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은 달

라졌다. 재외동포 중 조선족은 1990년대 초부터 경제적 격차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한국으로 대거 입국했다. 초기에 그들은 오랜만에 다시 만난 형제처럼 인식되었고 특유의 말투와 문화로 인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했고 그로 인해 한국인에게 '무시'와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200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멸시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조선족이 67%에 달했다(설동훈 2002, 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은 한국 사회에는 특유의 단일민족관념으로 인해 수혜를 입었다. 1998년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 재외동포법을 제정할 때 중국의 반대로 인해 조선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지원으로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고 2007년에는 방문취업제가 실시됨으로써 그들은 중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로서의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2000년대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전문직에 종사하는 조선족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다수는 한국인이 꺼리는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전히 재외동포 중 다수를 차지하는 재미동포에 대해서도 한국인의 인식은 과거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민주화와 '3저호황'에 따른 경제적 성공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였고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열등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 특히 1990년대에는 '역이민'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한국의 상황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재미동포에 대한 '동경(憧憬)의식' 역시 많이 약화되었다. 비록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경향이 일시 역전되기도 했지만 미국의 위상 약화 및 배타성의 증가로 인해 한국인에게 재미동포는 더 이상 큰 동경의 대상은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조선족보다 재미교포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92%가 재미교포를 동포로 답한 데 비해, 조선족에 대해서는 77%만이 동포라고 답했다(Seol and Skrentny 2009, 160). 이는 한국인이 같은 조선족보다 재미교포를 더 친근하게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조선족이 대부분 해방 이전 이주한 사람들의 자손이자 오랫동안 접촉하지 못

했고, 한국과 다른 사회주의 체제에 살았으며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 출신이었다는 것과 같은 여러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1990년대 이후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은 재외동포의 형성 과정, 출신지역과의 역사적 관계,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적 지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위계적' 성격을 보인다. 곧 한국인은 재외동포라도 출신국에 따라 차별적 인식을 가졌다.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친근하지 않은 이웃

새터민은 중국동포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 새롭게 한국 사회에 유입된 한민족이다. 그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그들의 유입은 1990년대 초반까지 10명 이내의 적은 인원이었으나 1994년 김일성 사망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 1,043명, 2002년 1,138명이었고, 2006년부터는 매년 2,000명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기존 북한 이탈주민의 중간 역할, 브로커들의 활동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입국경로가 이전에 비해 다양화되었고 먼저 입국한 가족이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입국을 하는 것

〈표 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매우 친근	다소 친근	별로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
2005	7	29.3	61.8 (별 감정이 없다 46.8 + 다소 거리감이 느껴진다 15.0)	1.9 (매우 거리감이 느껴진다)
2007	2.6	33.4	56.8	7.0
2008	3.1	33.1	57.2	6.6
2009	3.1	33.2	55.3	8.0
2010	4.4	38.1	50.8	6.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101

도 중요한 증가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입국자들의 직업 배경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들은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로 진출한다(최승호 2010, 162).

한국인은 유입 초기에는 새터민에 대해 호기심과 동정심을 보였지만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 따라 입국자가 증가하자 점차 그들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들은 언어, 사고,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남한 사람들과 상이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없었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한국 사회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다. 그래도 2000년대 후반의 조사에 따르면 이전보다 새터민에 대한 한국인의 친근감은 늘어나고 거리감 역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수적으로는 여전히 친근감을 가진 한국인보다 거리감을 가진 한국인이 더 많았다.

결국 2000년대 후반의 조사에 따르면 새터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한국인이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한국인은 새터민이 같은 한민족일지라도 남한과 북한의 '거리' 만큼 그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곧 한국인은 새터민에 대해 머릿속으로는 민족 동질성을 떠올리지만 현실에서는 상이한 정치적 정체성과 이질성을 더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IV. 나가는 말: 요약과 전망

이상에서 여러 쟁점과 관련된 한국인의 의식을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를 고찰했다. 그것은 1987년의 민주화와 1990년대 초의 냉전 붕괴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추동된 것이다. 권위주의 시기 한국 민족주의의 반공과 친미적 성격을 변화시킨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붕괴와 북한의 변화는 한국인의 통일 인식을 변화시켰다. 권위주의 시기 통일인식은 북한에 대한 정보와 교류가 차단되었던 만큼 민족

동질성에 기초한 감성적이고 당위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런데 1990년대 북한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겪자 한국인들은 북한이 조만감 붕괴할 것이라는 기대, 곧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김정일 체제가 안정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와의 교류가 확대되자 이러한 기대는 도리어 약화되었다. 특히 한국인은 10여 년간의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이질성을 확인했고 즉각적인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통일된다고 해도 그것이 남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인은 즉각적인 통일보다 점진적인 통일을,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되는 통일보다는 '평화적인' 분단 상태가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결국 2000년대 한국인의 통일인식은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성격을 가졌다.

둘째, 민주화 직후 전개된 통일운동과 북한바로알기운동은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호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의 NPT 탈퇴와 핵·미사일의 개발 및 경제난은 이런 호의적 대북인식을 역전시켰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교류 확대로 인해 다시 개선되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부시 행정부와의 갈등, 결정적으로 2000년대 말의 무력 공격으로 인해 다시 악화되었다. 이렇게 민주화 이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호전과 악화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은 핵과 미사일만 제외한다면 북한은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후진성'으로 인해 한국인의 대북 호감도 저하되었다. 결국 민주화 이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무조건 북한을 절멸시켜야 한다는 냉전시기의 맹목적인 반공주의에서 벗어나 '체제 우월감'에 기초한 반공주의로 전환되었다.

셋째, 한국인의 대미인식 역시 198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결정적으로 변화했다. 냉전시기 한미 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한국인의 대미인식은 숭미(崇美)의식이라고 할 정도로 친미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1980년대 반미의식이 등장했고, 냉전 붕괴 이후 노골적으로 자국이익만을 추구한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친미의식이 약화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드러낸 사건들은 한국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가함으로써 '감정적인' 반미의식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2000년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부상, 그리고 2000년대 말 북한의 무력 사용은 한국인의 대

미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곧 한국인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이용하려는 현실주의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결국 2000년대 한국인의 대미인식은 숭미도, 반미도 아닌 현실주의적인 대미의식으로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내적 측면인 단일민족관념의 변화를 가져온 일차적 요인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의 대거 유입, 그리고 2000년대부터 증가한 결혼 이주자와 새터민의 유입이었다. 그중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1987년 민주화가 가져온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 중 하나이다.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권익 향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은 더 이상 3D 업종에서 일하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3D 업종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화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가져온 간접적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 이주자의 증가와 새터민의 유입에는 민주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한국 민족주의의 또 다른 특징인 단일민족관념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자)과 조선족의 대거 유입이었다. 소수 화교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살아본 경험이 없던 한국인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유입되자, 그들을 무시하고 편견을 드러냈으며 그들을 차별했다. 이는 단일민족관념이 지닌 배타성을 잘 드러냈다. 그러나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특히 2000년대 결혼 이주자가 대거 유입되자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관념을 넘어서 다문화 담론을 통해 외국인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그 결과 외국인에 대한 배타상은 약화되었지만 단일민족관념이 해체될 정도는 아니다. 여전히 다수의 한국인은 단일민족관념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1990년대 이후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성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 단일민족관념이 해체될 정도는 아니다.

둘째, 단일민족관념에 변화를 가져온 또 하나의 요인은 같은 한민족이지만 외국인인 조선족의 대거 유입이었다. 그들은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수가 늘고 이질성이 드러나면서, 게다가 그들이 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동정 또는 무시의 대상이 되었다. 곧 한국인은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난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또는 직업과 경제적 위상에 근거하여 그들을

무시했다. 이는 재미교포 및 재일교포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것으로 조선족의 유입이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위계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 곧 한국인은 같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를 그들의 형성 역사와 출신국의 경제적 위상에 따라 차별한다. 이는 한민족은 모두 하나라는 단일민족관념의 동질성이 지닌 허구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로 들어온 새터민도 단일민족관념의 허구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엄혹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관심 또는 동정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수가 늘고 이질성이 확인되자 한국인은 점차 그들과 거리를 두려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 다수의 한국인은 그들에게 친근감보다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결국 새터민의 등장 역시 단일민족관념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족주의는 외적으로는 반공과 친미, 그리고 통일지상주의에 기초한 당위적 인식에서 자신의 이익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인식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반면 단일민족관념은 외국인, 재외동포, 새터민의 유입 과정에서 그 허구성을 노출시켰지만 아직도 한국인의 인식에서 지배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을 넘어서는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의 확산과 노동 및 결혼 이주자를 필요로 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는 한국인에게 단일민족관념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민족관념도 점차 약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택 편. 2007.『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EAI.

강원택. 2007.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강원택 편.『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EAI.

국정홍보처. 2000. "남북관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 http://www.allim.go.kr/jsp/dataroom/dataroom_research_view.jsp?id=259(검색일: 2005.10.20).

민족통일연구원. 1993.『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_____. 1994.『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_____. 1995.『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_____. 1998.『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2. "일반국민 및 자문위원 통일여론조사(Gallup Korea)." http://www.acdpu.go.kr/boardz/List.asp?txtBoardSeq=3803(검색일: 2005.10.20).

_____. 2003. "일반국민 및 자문위원 통일여론조사(미디어 리서치)." http://www.acdpu.go.kr/boardz/List.asp?txtBoardSeq=3803(검색일: 2005.10.20).

_____. 2004. "2004년 제3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보고서(한국 리서치)." http://www.acdpu.go.kr/boardz/List.asp?txtBoardSeq=3803(검색일: 2005.10.20).

_____. 2005. "2005년도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결과." http://www.acdpu.go.kr/Boardz/Read.asp?txtCurPage=1&txtBoardSeq=3803(검색일: 2005.10.2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00. "국민의 정부 2주년 통일문제 특별여론조사 결과." http://www.acdpu.go.kr/boardz/List.asp?txtBoardSeq=3803(검색일: 2005.10.20).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3.『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7.『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_____. 2010.『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설동훈. 2002. "국내 조선족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동향과 전망』52호.

_____. 2006. "국민·민족·인종: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한국사회학회.『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구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 보고서.

세종연구소. 1995~1997.『국민의식조사』. 성남: 세종연구소.

어네스트 겔너. 최한우 역. 2009.『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KUIS Press.

이강국. 2005.『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세계화의 두 경제학』. 서울: 후마니타스.

이강로. 2004. "한국 내 반미주의의 성장과정 분석."『한국정치학회보』제44집 4호.

이내영. 2007. "한국인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과 국가정체성." 강원택 편.『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EAI.

이삼식 외. 2011.『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정덕 외. 2011.『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문석. 2007.『민족주의 길들이기』. 서울: 지식의 풍경.

_____. 2011.『민족주의』. 서울: 책세상.

전재호. 2006. "세계화·정보화 시대 한국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 반공의식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40집 3호.

_____. 2007. "'이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외국인 정책' 변화."『한국과 국제정치』제23권 제3호.

_____. 2008. "세계화 시기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쟁점과 대안."『한국과 국제정치』제24권 제2호.

최승호. 2010.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정치정보연구』제13권 제1호.

통계청. 2012. "국제결혼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 _IdxMain.jsp?idx_cd=2430(검색일: 2012.2.9.).

통일연구원. 1999.『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통일연구원.

_____. 2005.『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통일연구원.

황정선 외. 2007.『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 J. 홉스봄. 강명세 역. 1995.『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비평사.

Smith, Tom W., & seokho Kim. "National Pride in Comparative perspective:1995/96 and 2003/04."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18, No.1.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2009.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Vol 9(2).

『중앙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투고일: 2012.03.03 심사일: 2012.04.13 게재확정일: 2012.04.15

【ABSTRACT】

Changes in Korean Nationalism since Democratization: Focusing on Attitudes towards Unification, North Korea, the USA, Foreigners, Overseas Koreans, and North Korean Refugees

Jeon, Jaeho | Research Fellow, SSK Research Unit,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how Korean nationalism has been changing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focusing on attitudes towards unification, North Korea, the USA, foreigners, overseas Koreans, and North Korean refugees.

First, changes in condition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country, including democratization and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ystem, brought about corresponding changes in the discourses of anti-communism and pro-Americanism, the core discourses of Korean nationalism. As a result, unification changed from an emotionally required task to a realistic and less aggressive task, blind antagonism towards North Korea changed to anti-communism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South Korean superiority, and attitudes towards America changed from blind pro-Americanism to more realism.

Second, the mass influx of foreigners such as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as well as overseas Koreans, including Korean Chinese and North Korean refugees, changed the notion of Korea as a homogenous nation. While the influx of migrant workers exposed the exclusivity inherent in the notion of a homogenous nation, the increase in marriage migrants diminished the very idea of homogeneity and brought about the discourse of multiculturalism. Also, the great influx of Korean Chinese and North Korean refugees made people recognize the heterogeneity and distance within themselves, forcing them to face the fictitious nature of the nation's homogeneity.

In conclusion, I expect that these changing trends in Korean nationalism since democratization, i.e. the expansion of realistic attitudes and the rupture in the

concept of a homogenous nation, will continue as younger generations increase, armed with national pride and democratic awareness, and the structure of Korean society requires an influx of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Key Words | nationalism, unification, USA, North Korea, Overseas Koreans, North Korean Refugees